

[지방 발전 '100조 프로젝트']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논의 본격화

스스로 세금 거둬 자립기반 확보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세율·조세 감면 조례 제정 등 검토

15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방안이다.

이는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 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원만 나눠주면 불균형 극심, 보완책 마련=재정 자주권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과 함께 지방자치체의 핵심으로 꼽힌다. 재정 자주권은 지자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고 이를 지방 발전 재원으로 삼되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통상 연방제 국가가 아

니면 소비세와 소득세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거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된 데는 두 세금의 세원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소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가액 가운데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이를 되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의 경우 국제청과 관세청(수입분)이 국제분과 함께 거둔 지방소비세를 서울시에 넘긴 뒤 이를 다시 보완기준에 따라 배분해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세·보조금 자율성 제고도 논의=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면서 상·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탄력세율을 능가하는 지방 재정 자율권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세부 과세대상, 비과세나 감면 등 조세특례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배분된 재원의 용도규제를 대폭 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보조금제'가 그것이다. 연합뉴스

수질·환경 개선 중점...1천811억 투입

■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어떻게 하나 하수·하천 정비... 황포돛배 운항 구간 준설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중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영산강이 포함, 전남도의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관련 예산은 1천811억원이다.

명칭은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지만 이번에 반영된 예산 대부분은 뱃길 조성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수질 환경 개선사업에 집중돼 있다.

현재 영산강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5급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1천428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 영산강을 2급수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수질개선 사업은 영산강 주변 8개 시군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하수관, 하수구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탄~영산포 구간 하도 준설 사업과 천변저지류 조성 사업에도 28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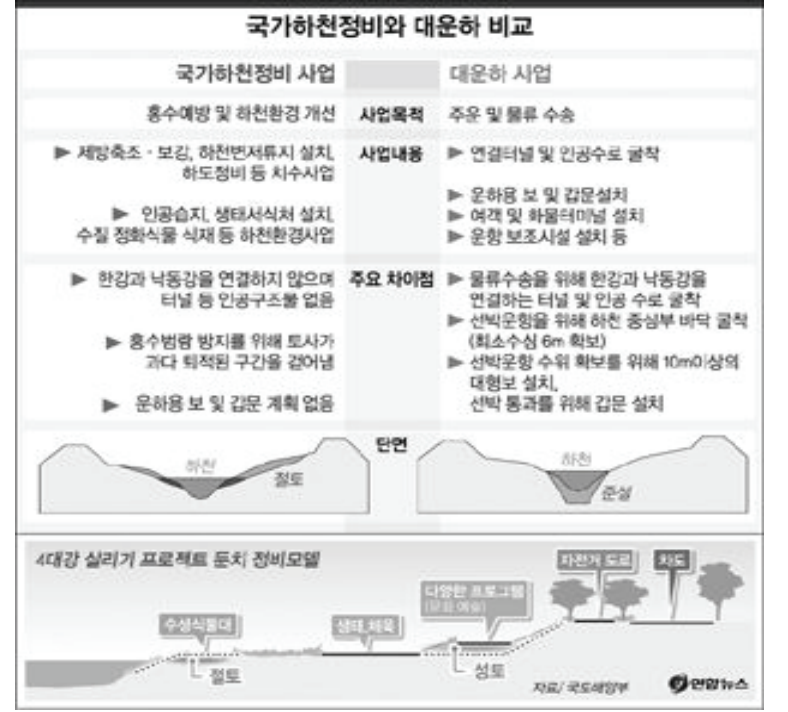
원이 반영됐다. 이중 내년 사업에는 하도 준설에 80억원, 나머지는 천변 저지류 조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배정돼 있으며 하도 준설은 나주 황포돛배 운항 중인 영산포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사업 추진방안의 7개 선도사업 지구에 나주·합평이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이달 말부터 하도 준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실시계획이 끝난 영산강 강변도로 사업과 나주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등에도 98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된다.

이 같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와 전남도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영산강의 경우 전남도의 최종 목표는 뱃길복원이라는 점에서 대운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내년에 예정된 국고 예산에는



뱃길복원과 관련된 사업은 하도 준설 하나뿐이며 그나마 나주 영산포 인근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뱃길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운하의 전단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연락수로·배수갑문·통선문 확장은 점에 대운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내년에 예정된 국고 예산에는

지방 건설·유통·관광 산업 대폭 지원

■ 지방 발전 세무안

수주액 인상 등 규제 완화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과 유통,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해당 시·도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 기준을 올려

잡기로 했다. 국가기관 사업은 '50억 이하'에서 '74억 이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업의 경우 예초 각각 '50억 이하', '70억 이하'였던 것을 모두 '150억 이하'로 높인다.

2012년까지 30개 지방공설시장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남은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를 마치고기로 했다.

침체된 지방 상권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주변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 복원을 전제로 저밀도·친자연환경 숙박시설, 이른바

'에코빌리지'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자연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입지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감안해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쇠퇴한 광역시 옛 도심과 지방 중소도시들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지원법'을 만든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지역 건설사 적극 참여케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 사업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것이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년 편입학생 공.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대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12월 1일 첫진도. 김영 대학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첫진도 (기본서 이론)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227-8003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정, 교세, 관법, 검찰, 출교, 보보, 복소, 기 30, 주부, 특별, 반 10, 기, 능, 직, 직 40. '09년 시험안내. 개강 1월 2일 (주·야간반 포함). 무등고시학원. 222-4560